아시아 모든 문화는 '문화전당'으로 흐른다

한·동남아 문화장관 회의 '문화자원 외교' 성과

전당에 동남아 각국 유산 소개…문화축제도 개최

27·28일 광주서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열기로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가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아시아 각국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문화자원 외교'가 결실을 거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개최한 '제1회 한-동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전당의 동남아시아 문화콘텐츠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제1회 한-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의 연장선상으로, 아시아문화 교류의 거점으로서 문화전당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문화장관 회의는 문화전당에서 동남아시아 문화를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문화전당의 창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회의에 참가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문화관련 장·차관 들은 회의의사록을 채택, 이런 내용을 확약했다.

이들은 회의 의사록에서 "회원국의 문화유산과 예술을 문화전당에 소개하고, 각국의 문화축제를 문화전당에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다짐했다. 예술·문화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키우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모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또 문화유산 보존과 정보공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작자 레지던시, 세미나 등 공동 창작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회의의사록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와 문화교류를 체계화하기 위해 각국 문화부 국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어 문화장관 회의의 정례화를 논의할 방침이다. 오는 2015년 문화전당이 개관하는 해에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장관들을 광주에 초청, 문화전당을 통한 교류·협력을 다짐하는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한-동남아 문화장관회의는 '아시아문화 교류의 허브'를 표방하고 있는 문화전당에서 활용할 자원을 확보하는 등 내실을 다지고 문화전당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아시아권 국가와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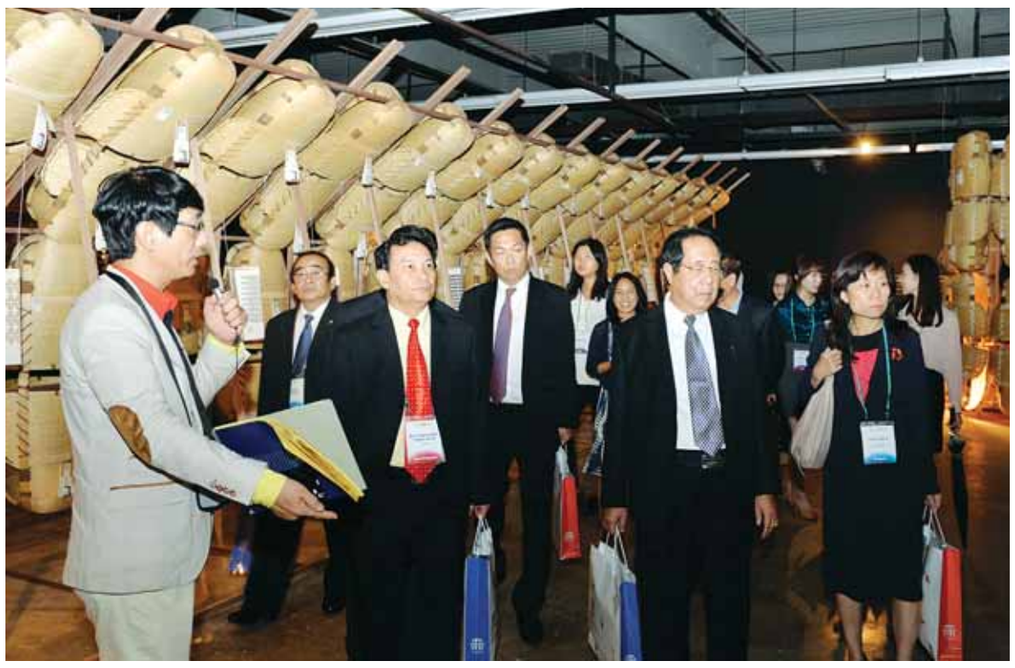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쳐 한·중·일 3개국 문화장관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광주를 포함해 일본 요코하마(橫濱), 중국 취안저우시(泉州市) 등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을 대내외에 알리는 선포식이 주요행사다.

3개국 문화장관들은 이 행사에서 광주를 포함한 한·중·일 3개국 문화도시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열리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행사의 내용을 확정, 발표한다. 광주는 이 행사를 바탕으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 3월 동아시아문화도시 오픈행사, 동아시아 유니버시아드 캠프 등 15개 행사를 연중 개최할 계획이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유럽연합이 1985년부터 문화수도를 선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본뜬 한·중·일 문화협력 체계로, 한·중·일 문화장관의 합의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디자인비엔날레 관람 지난 6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제1회 한-동남아시아 문화장관 회의'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뒤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관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란음모' 입증 어렵나…

국정원, 이석기 '여적죄' 적용 검토

김재연·김미희 의원도 소환 방침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주말에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전날에 이어 8일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사흘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관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혐의 내용을 짚어가며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RO'(Revolution Organizati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계속된 진술거부에도 기존 수사내용과 증거가 확실해 수사의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다.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북측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비밀회합에 같은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수원지검 공안부 전담수사팀도 이날 대부분 출근,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홍 부위원장 등을 조사했다.

한편 북한은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북한과 연결하려는 모략을 꾸미고 있다며 사흘째 남한 당국을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파쑈 광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보원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내란음모' 감투를 씌우고 우리와 억지로 연결해보려고 갖은 모략을 다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남한 당국이 이번 사건을 북한과 연결하려는 것은 "연북통일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에 대한 도전이며 대화상대방인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전두환 '항복' 임박

미납 추징금 1672억 납부계획 밝힐 듯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이르면 이번 주중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자진 납부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16년간 끌어온 전씨의 추징금 환수 작업에 마침표를 찍을 날이 임박해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막판 논의를 진행중이다. 전씨 자녀들은 지난 4일에 이어 6일 저녁에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장남 재국씨의 거주지에 모여 추징금 납부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재국씨가 700억원 상당, 재용씨는 500억원대, 삼남 재만씨는 200억원대, 딸 효선씨는 40억원 등을 부담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국씨가 소유 미술품 등을 통해 50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고 재만씨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이 100억원 이상을 분담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이 압류한 각자 몫의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가치문제 등이 남았지만 (자진 납부 계획이) 무르익은 걸로 보인다"면서 "주초나 주중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교과서 아닌 유해서적"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미화왜곡 대책위' 구성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등에 대한 편향·왜곡 등 이념 논란이 불거진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 6일 '역사교과서 친일독재미화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위 구성을 의결, 위원장으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을 선임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책은 교과서가 아니라 유해서적 수준으로, 식민사관 독재사관을 부추기고 있을 뿐 아니라 친일·독재 미화에 표절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교과서가 올해 1월 검정심사를 신청할 때는 지금보다 왜곡 정도가 훨씬 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진압군이 투입된 것처럼 원인과 결과의 선후를 거꾸로 왜곡시켰다. 진압군의 발포사실을 생략한 채 시위대가 도청을 점거해 계엄군이 투입되고 유혈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계엄군 투입을 합리화하는 듯한 기술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5월10일 보완요구가 있었지만 6월20일 접수된 수정본 역시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아 7~8월 재보완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5·16 군사 정변에 대해서는 "5·16 군사 정변 직전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위기로부터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다. 그래서 5·16 군사 정변은 큰 저항을 받지도 않았다"는 등 5·16은 반공을 위해 필요했다는 취지로 미화했다.

특히 최종 합격 판정을 받은 교학사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술내용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본은 명성왕후를 '중전 민씨'로,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조선과 명나라와의 공무역을 '조공무역'으로 쓰는 등 기본적인 용어마저도 왜곡시켰다.

이 의원은 "왜곡의 정도가 도를 넘어선 책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많은 애국 지사, 순국 열사 및 그 유가족과 후손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며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국민 각자 알아서 … ?!